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이 선 중(Lee, Sun Jo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To do tha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is classified into factor of preventive-controlling corruption and post-controlling corruption. First, the result of mediating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factor post-controlling corruption on integrity is not significant except the factor of intention of leader's integr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 of organization's soundness is moderating effect on the integrity.

Key words: Interaction of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mediating effect of post controlling corruption, moderating effect of post controlling corruption

I. 서론

“명포수는 새의 날아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총을 겨눈다”는 격언이 있다. 이는 새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속도 등을 예측해서 총을 겨냥해야지만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는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격언으로 생각된다.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야 부패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는 상존해왔으며 부패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매 정권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패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대안들이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인지 혹은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용세(1998)는 부패방지를 위한 사람이 고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들을 대부분 만드었지만 부패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 백화점의 상품 나열식 처방이 아닌 부패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패의 원인과 그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적용들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부패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는 접더라도 일정정도 한국사회에서의 부패예방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투영된 개별 정책프로그램 및 제도 등에 대한 효과성 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프로그램 및 제도 등이 담고 있는 부패통제요인에 대한 검토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고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통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부패예방적 접근과 부패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적 측면의 사후통제적 적발·처벌전략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부패통제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단일선상에서 같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에 의한 요인들이 부패를 예방하는데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패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패의 양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부패통제요인의 효과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부패통제요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따른 부패발생원인과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요인 및 사후처벌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이 부패예방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지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II. 이론적 검토

1. 기대비용모델과 주인대리인모델을 통한 부패의 접근

이균우(2008)는 부패의 원인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며 부패행위와 거버넌스의 질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부패문제 대응에 있어 그 방법과 수단을 달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패발생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로 주인-대리인 모델, 신공공관리 측면, 신제도적 경제학방법으로 구분하여 부패요인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주인-대리인 모델을 통한 부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Klitgaard(1988)는 부패는 독점권과 재량권이 많을수록 그리고 책임성이 부족할수록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법규 등을 강화하여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Rose Ackerman(1978)은 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적발확률, 처벌확률의 제고 및 처벌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엄격성 및 확실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범죄학에서

제재의 엄격성과 확실성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요인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Becker, 1968; Mathur, 1978)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의 엄격성과 확실성 또한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패를 통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활동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법 등이 보통 논의된다. 부패예방은 부패발생의 원인에 그리고 부패에 대한 처벌은 부패의 관리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이하섭, 2012).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냐 사후적발에 중점을 둘 것이냐의 문제는 부패통제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로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은 부패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실 현재 부패통제와 관련하여 OECD(2005)는 국가의 행정통제 경향이 사후통제보다는 사전통제로 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최순영·최진욱, 2007; 재인용),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부패통제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Klitgarrrd의 논의에서 나타난 부패방지요인을 부패의 사전예방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Rose Ackerman의 범죄처벌에 대한 모델을 통해 사후처벌적 요인을 설정하여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종래에 논의되어왔던 부패 예방 혹은 부패통제방안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이 부패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연계되어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1) 부패 발생 요인

부패의 발생요인 특히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에 관한 논의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분석수준 및 연구주제 등에 따라 연구자마다 부패발생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부패발생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패의 발생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부패발생요인
Kaufmann(1997)	법치주의와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취약성, 시민사회의 제한된 자유, 낮은 행정수준, 경제정책 및 국가의 적은 규모
Lambsdorf(2006)	공공부문의 크기, 정부규제의 질, 경제적 경쟁의 부족, 정부의 구조, 분권화, 문화요인, 전통주의 등 사회적 가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 지리적 특성과 역할
Tomas, et al(2000)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결핍, 빈약한 법률규정,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세금독점, 공무원의 전문가적 자질 부족
Brownsberger(1983)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태도와 습관, 관료들에 대한 압력정도, 정치적 환경, 종족성
김영종(1988)	맥락적 측면, 구조적 측면, 미분화된 권력문화, 행정통제 미비, 정치문화 미성숙, 건전한 시민문화 미비, 정경유착의 문제
김해동(1990)	개인적 요인: 개인의 자질과 본성, 사회문화적 소산: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제도 및 관리적 측면: 사회의 법과 제도의 결함이나 이들에 대한 관리기구와 운영상의 문제, 체제론적 측면: 정부와 일반국민과의 상호작용의 소산
유종해(1992)	환경적 요인: 정치경제의 불안정, 공동체의식의 박약,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전통적 행정문화 조직적 요인: 낮은 보수수준, 신분 불안정, 행정규제의 비현실성 개인적 요인: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김경덕(1996)	정치행정적 체제요인 제도적·구조적 요인: 정치구조의 취약성, 정부기능의 취약성, 관리기준의 비현실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 이권의 증가와 다양화, 규제의 증가와 다양화 사회적·문화적 요인: 사회적 불안정, 의리의식, 관직사유의식
김성호(2003)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개인적 요인
김용철(2005)	개인적 차원, 조직구조적 차원, 환경적 차원
곽현근(2010)	개인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김귀영(2011), 한동효(2012), 이하섭(2013)의 내용을 재인용

부패발생요인의 다양성은 분석단위가 국가수준, 조직수준, 개인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수준에서의 연구에서 부패발생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김해동, 1990)

2) 부패 통제 요인

부패통제는 부패통제의 주체, 부패통제의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시기를 구분으로 사전예방적 통제, 사후적발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단기적 통제, 장기적 통제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김병섭·백승빈, 2001).¹⁾ 이러한 부패통제요인은 단일하게 어느 하나의 통제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이면서 단기적 혹은 장기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주인대리인 모델 접근방법과 기대비용 모델은 사전예방적 통제와 사후적발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부패통제요인들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부패통제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통제요인은 사전예방적 통제와 적발 및 처벌을 강조하는 사후통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부패통제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중(1988)은 입법 정책적 개혁장치 도입, 구조적 부패문화 개혁, 행정윤리교육,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조직문화개혁, 공직자의 보수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룡·안희정(2000)은 개인적 측면에서 업무의 투명성 제고, 규정의 준법성 제고, 사회문화적 수단으로 뇌물에 대한 의식개혁, 신고문화 배양을 제도적 수단으로 부패교육, 부패관련 법제의 효과성 제고, 통제적 수단으로 통제기관의 효과성 제고, 시민단체의 통제 효과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중(2005)는 정보공개 활성화, 공직윤리 강화, 감사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 행정과정의 절차화 및 투명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영재(2009)는 기관장의 리더십, 내부통제전략으로 감사의 실효성, 행동강령의 실효성, 처벌수준의 적정성, 내부공익신고, 교육훈련, 업무절차 및 업무내용의 공개 정도를 외부통제전략으로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 시민단체의 감사활동 등을 부패방지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통제요인은 연구자들의 부패에 대한 분석수준이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제유형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구분하느냐에 따라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이 동일한 유형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본문에 논의한 통제유형 이외에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행태적 통제와 제도적 통제,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 특정적 통제와 포괄적 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최순영·최진욱, 2007).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검토된 부패예방요인들을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사후통제적 요인인 적발 및 처벌이 사전예방적 요인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요인과 적발·처벌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후통제적 요인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후통제적 요인을 사전예방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부패발생원과 부패예방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일반국민, 공무원 등의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2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부패해결을 위한 최대과제로 응답자의 34.1%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꼽고 있어 다른 과제보다도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처벌을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일반국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다른 부패통제요인보다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국민들도 부패를 예방하는데 있어 적발과 처벌이 일정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직자의 ‘숨방망이 처벌’도 문제이다. 부패인식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 징계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인원 12,050명중 전체의 87.3%인 10,520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에 국한되었고 파면, 해임, 강등은 전체의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2012).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2010)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연평균 인용률이 66%로 나타났고, 국가공무원은 40.4%로 평균 2명 중 1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시스템이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그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부패통제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검찰의 부패범죄 기소율과 법원의 판결에서도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실효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전체의 35.9%로 나머지 64.1%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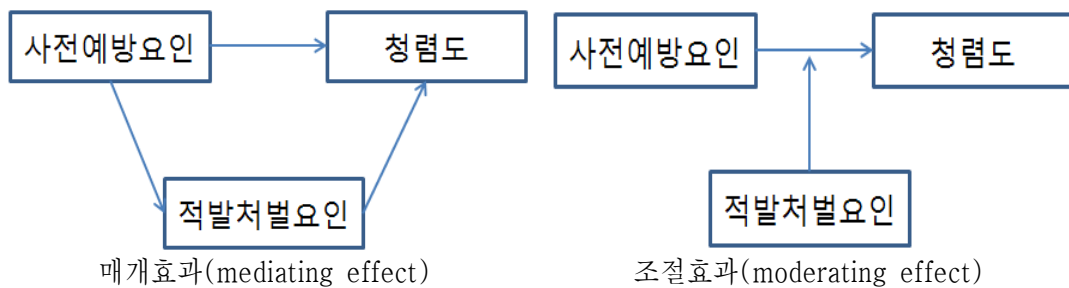
2) 2004년 조사 이래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는 3순위에 들고 있는 요인으로 국민들은 부패예방에 있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가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났다(연성진, 2007). 법원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저널, 2013).

본 연구는 사전예방적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부패통제요인 중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인 적발 및 처벌 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부패행위를 통제하는데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사전예방적 요인으로 기관장의 청렴 의지, 행동강령, 청렴교육, 부패친화적 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건전성 설정하였다. 사후처벌적 요인으로는 적발확률 및 처벌강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이 청렴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적 요인이 적발 및 처벌요인을 통해 매개되어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조절효과는 적발 및 처벌요인이 사전예방적 요인과 청렴도와의 인과관계에서 각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설정한 적발 및 처벌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적발 및 처벌 요인이 사전예방적 요인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모델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매개효과 가설	I. 적발처벌요인은 부패사전에방요인과 청렴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I-1. 적발처벌요인은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2. 적발처벌요인은 청렴교육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3. 적발처벌요인은 행동강령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4. 적발처벌요인은 조직건전성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절효과 가설	II. 적발처벌요인은 부패사전에방요인과 청렴도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I-1.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기관장의 청렴의지가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II-2.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청렴교육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II-3.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행동강령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II-4.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조직건전성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2. 연구방법

1) 변수의 선정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부패예방요인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나타난 부패통제요인 등을 선정하여 분석변수를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은 ‘기관장의 청렴의지’, ‘청렴교육’, ‘행동강령’, ‘조직건전성’, ‘적발 및 처벌’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의 세부 측정지표는 선행연구에서 주되게 논의되었던 요인들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기관장의 청렴의지’는 기관장의 의사결정의 공정성, 청렴에 대한 대내외적 전파 및 실천으로 측정하였다. ‘조직건전성’은 조직의 부패친화적 문화를 의미하는 지표로 세부 측정지표로 ‘상사의 업무 공정성’, ‘상사의 업무회피 및 전가 정도’, ‘의사소통의 정도’,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인한 ‘연고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부패친화적 문화의 정도는 역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청렴교육’은 교육에 대한 호응정도, 교육의 다양성, 교육의 체계성을 하위변수로 측정하였다. ‘행동강령’은 행동강령에 대한 숙지정도, 행동강령에 대한 평가체계,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등을 측정하였다. ‘적발 및 처벌’은 조직의 비리에 대한 처벌의 강도 및 적발의 정도 그리고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사 체계의 구축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10점 만점으로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2012년 11월에 K기관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50명 중 499명이 설문에 응하였다.³⁾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부패통제요인을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사후처벌적 요인이 사전예방적 요인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발 및 처벌요인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449명 중 남성이 50.8%, 여성이 48.8%로 나타나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은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41.9%로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근무연수는 5년 이하의 경력이 전체 응답자의 63.5%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228	50.8
		여	219	48.8
		무응답	2	0.4
		총계	449	100
연령		20대	122	27.2
		30대	188	41.9
		40대	113	25.2
		50세 이상	23	5.1
		무응답	3	0.7
		총계	449	100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근무연수		5년 이하	285	63.5
		6-10년	78	17.4
		11-15년	30	6.7
		16-20년	31	6.9
		21년 이상	23	5.1
		무응답	2	0.4
		총계	449	100
학력		전문대졸	8	1.8
		대졸	148	33.0
		대학원졸	291	64.8
		무응답	2	0.4
		총계	449	100

3) 본 연구의 설문자료는 2012년 K기관의 청렴문화 진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에서 얻은 설문 결과임

2. 측정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부패통제요인으로 설정된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과 크론바하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측정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약 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롭게 묶인 요인들의 크론바하 α 값 또한 0.8이상으로 나타나 측정요인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적발 및 처벌요인	조직 건전성	기관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행동강령	
적발확률의 제고	.795	-.232	.291	.227	.201	.928
처벌 강도의 적정성	.771	-.233	.328	.228	.194	
자체감사의 상시적 작동	.752	-.256	.229	.248	.272	
자체감사 체계의 실효성	.686	-.216	.241	.338	.227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의 정도	-.093	.865	-.144	-.104	-.099	.849
업무책임을 회피 전가하는 경우의 정도	-.135	.844	-.168	-.134	-.177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소통부족	-.268	.715	-.179	-.238	-.066	
연고주의(학연, 혈연,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정도	-.374	.616	-.136	-.038	-.193	
기관장의 공정성	.244	-.243	.812	.136	.168	.910
기관장의 조직 내부 구성원에 대한 청렴의지 전파	.262	-.199	.812	.238	.217	
기관장의 대외적 청렴의지 실천 노력	.325	-.177	.777	.246	.237	
청렴교육 방식의 다양성	.195	-.079	.208	.804	.241	.840
청렴교육에 대한 호응 정도	.317	-.251	.190	.725	.209	
청렴교육의 체계성	.311	-.220	.220	.667	.343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의 이행 점검 정도	.222	-.165	.261	.258	.827	.892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 숙지에 대한 평가	.254	-.153	.239	.339	.769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의 실천 정도	.429	-.356	.184	.263	.608	
고유값	3.268	2.997	2.610	2.370	2.281	
분산비율	19.226	17.630	15.354	13.941	13.417	
누적분산비율	19.226	36.857	52.211	66.152	79.569	

KMO=.932 Bartlett=5967.539 p=.000

3. 적발 및 처벌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1)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란 두 변수의 인과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효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가 존재함으로써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고 이 매개변수가 다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매개적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하나의 매개변수가 존재하는 것을 단일 매개변수 모형이라고 부른다(이학식, 2012). 본 연구도 적발처벌요인이 독립변수인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요인이 종속변수인 청렴도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단일 매개변수 모형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1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 4단계는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간의 효과(총효과)가 선행변수 및 매개변수와 결과변수의 투입으로 나타난 결과의 효과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이 효과크기를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핀다(이학식, 2012).

이와 같은 단계를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조직건전성, 기관장청렴의지, 행동강령, 청렴교육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친화적 문화를 측정하는 조직건전성은 역문항으로 값이 부(-)의 값을 감안한다면 건전성이 제고될수록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F	R^2 (Adj R^2)
모형1	청렴도	조직건전성	-.325	-7.924***	122.899	.533(.529)***
		기관장청렴의지	.287	6.340***		
		행동강령	.165	3.176**		
		청렴교육	.102	2.034**		
모형2	적발 및 처벌	조직건전성	-.183	-5.187***	201.702	.651(.648)***
		기관장청렴의지	.283	7.239***		
		행동강령	.242	5.384***		
		청렴교육	.257	5.969***		
모형3	청렴도	조직건전성	-.304	-7.220***	99.902	.733(.537)***
		기관장청렴의지	.255	5.333***		
		행동강령	.138	2.570**		
		청렴교육	.072	1.395		
		적발 및 처벌	.114	2.057**		

p<0.05, *p<0.01

회귀분석 결과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각 단계별 조건들을 충족하였다.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매개변수를 포함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청렴교육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각 단계별 조건을 만족한 조직건전성, 기관장 청렴의지, 행동강령이 적발 및 처벌요인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값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값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유의수준 p값이 매개효과가 0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으로 이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2012).

본 연구의 Sobel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Sobel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obel 검증
조직건전성→적발 및 처벌	-.196	.038	
적발 및 처벌→청렴도	.157	.076	
조직건전성→적발 및 처벌→청렴도			-1.917
기관장청렴의지→적발 및 처벌	.277	.038	
적발 및 처벌→청렴도	.157	.076	
기관장청렴의지→적발 및 처벌→청렴도			1.987**
행동강령→적발 및 처벌	.251	.047	1.926
적발 및 처벌→청렴도	.157	.076	
행동강령→적발 및 처벌→청렴도			

p<0.05, *p<0.01

본 연구의 적발 및 처벌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각 단계별 조건들을 충족한 변수들에 대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적발처벌요인이 조직건전성과 행동강령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 처벌요인이 기관장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절효과 검증

본 항에서는 적발 및 처벌요인이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과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강도 또는 방향이 제3의 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 제3의 변수를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이학식, 2012). 조절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제3의 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발 및 처벌요인과 사전예방적요인은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분석함으로 적발 및 처벌요인이 다른 독립변수의 인과관계의 강도 또는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결과 조직건전성, 기관장의 청렴의지, 행동강령, 청렴교육 모두 청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발 및 처벌요인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발 및 처벌요인을 투입했을 때 청렴교육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다른 독립변수들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간 ΔR^2 변화량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로 설정한 적발 및 처벌요인과 다른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변화에 따른 ΔR^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유의미성을 검증할 때 ΔR^2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항 계수의 유의미성 여부에 따라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이학식, 2012). 분석모델 간 ΔR^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적발 및 처벌요인이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조직건전성과 행동강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적발 및 처벌의 영향이 클수록 조직건전성이 청렴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커진다는 의미로 이는 적발 및 처벌요인이 부패친화적 조직문화를 통제하게 됨으로써 부패친화적 문화를 감소시키고 조직의 청렴도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동강령의 경우, 적발 및 처벌요인의 영향이 클수록 행동강령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 규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처벌적 요인이 강해짐으로써 행동강령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패 통제 시 사전예방적 성격으로서의 자율적 규제장치와 사후통제적 성격이 강한 적발 및 처벌요인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청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조절효과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β	t	F	R^2 (Adj R^2)	ΔR^2
청렴도	조직건전성	-.476	-7.924***	122.899	.533(.529)	
	기관장의 청렴의지	.386	6.340***			
	행동강령	.236	3.176***			
	청렴교육	.166	2.034**			
	조직건전성	-.445	-7.220***	99.902	.537(.532)	.537***
	기관장의 청렴의지	.343	5.333***			
	행동강령	.196	2.570***			
	청렴교육	.118	1.395			
	적발 및 처벌	.157	2.057**	56.745	.545(.536)	.545***
	조직건전성	-.113	-.592			
	기관장의 청렴의지	.127	.609			
	행동강령	.782	2.870**			
	청렴교육	-.104	-.389			
	적발 및 처벌	.654	1.928*			
	조직건전성*적발 및 처벌	-.117	-1.767*			
	기관장의청렴의지*적발 및 처벌	.071	1.020			
	행동강령*적발 및 처벌	-.205	-2.228**			
	청렴교육*적발 및 처벌	.078	.891			

* p<0.1, ** p<0.05, *** p<0.01

3) 가설검증 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발 및 처벌요인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발 및 처벌요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개효과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적발처벌요인이 대부분의 사전예방요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렴도 인식에 긍정적 인식을 주는 요인들은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적발 및 처벌이라는 사후통제적 요인이 사전예방적 요인을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의 청렴의지는 적발처벌요인에 의하여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적발처벌요인이 청렴도를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전예방적요인뿐만 아니라 사후통제적요인인 적발 및 처벌도 청렴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위해 적발 및 처벌요인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적발 및 처벌요인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부패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부패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에서 처벌의 엄정성과 확실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현재 부패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온정주의

적 처벌이 부패행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매개효과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유의도검증		매개 형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I-1. 적발처벌요인은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	유의	△
I-2. 적발처벌요인은 청렴교육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N.S.	N.S	X
I-3. 적발처벌요인은 행동강령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	N.S	X
I-4. 적발처벌요인은 조직건전성을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의	N.S	X

△: 부분매개, X: 매개하지 않음

적발처벌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설명력이 .545로 다른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발처벌요인이 사전예방적 요인과 청렴도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의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적발처벌요인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적발처벌요인이 기관장의 청렴의지, 청렴교육이 청렴도에 미치는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교육의 경우 청렴도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발처벌요인을 조절변수로 투입했을 때 청렴교육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의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청렴교육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청렴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수용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

4) 청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자의 경험 상 청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공공부문의 청렴교육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위직의 경우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위직의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왜 하위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무슨 청렴교육이냐는 등의 불만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청렴교육의 경우 사회에서 발생하는 고위직의 부패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 등이 교육대상자의 청렴교육의 수용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렴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수용성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시스템의 영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다만 자율적 준수장치라고 할 수 있는 행동강령은 적발 및 처벌요인이 강화될수록 청렴도에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과의 상쇄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발처벌요인은 조직의 부패친화적 문화를 약화시켜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일반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부패친화적 문화를 감소시키고 조직건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확률을 제고하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조절효과 가설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II-1.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기관장의 청렴의지가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기각
II-2.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청렴교육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기각
II-3.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행동강령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기각
II-4. 적발처벌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조직건전성이 청렴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채택

V.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부패통제를 위해 논의되어 왔던 부패통제요인들이 단선적인 관계를 통한 경험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인 적발 및 처벌요인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부패통제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요인을 강조하고 사전예방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설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연고온정주의적 문화로 인한 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부패발생요인과 부패통제요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적발 및 처벌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는지에 대해서도 경험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사후통제적 적발 및 처벌 요인은 사전적 부패예방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패예방요인 등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후통제적 적발 및 처벌적요인 이외에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다른 매개요인 혹은 모델 설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패예방모델에 대한 다양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적발 및 처벌요인의 조절효과의 경우 부패친화적 문화를 약화시켜 청렴도를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한 효과를 상정하는 형태의 모델보다 적발 및 처벌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패행위 통제에 있어서 적정한 적발 및 처벌 등이 이루어질 때 청렴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의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적발 및 처벌요인이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부패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처벌적 요인의 청렴도에 대한 상호작용 검증을 통해 향후 청렴도 제고 및 부패예방에 있어 어떠한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부패통제요인에 대한 다양한 관계설정을 통한 풍부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자료는 처음부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측정문항을 통한 측정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청렴실태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수들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부패통제요인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분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부패통제요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통제요인의 도입 및 측정을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국민권익위원회. 2010.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실효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2012.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 김귀영. 2010.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병섭·백승빈. 2001. 김대중 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행정논총*, 39(3):27-52.
- 김영중. 1998. 지방행정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1-23.
- 김용세. 1998. 공직자 부정부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서울: 도서출판 두남.
- 김태룡·안희정. 2000. 부패의 결정요인과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3-18.
- 라영재. 2009.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4(2):1-24.
- 연성진·김용세·김혁래·유홍준·추형관. 2007. 부패사범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균우. 2008. 부패와 거버넌스. *한국부패학회보*, 13(2): 53-75.
- 이승중. 2005.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이하섭. 2012.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패학회보*, 18(2):113-132.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재.
- 최순영·최진욱. 2007.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동효. 2012. 한국과 몽골의 부패원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7(1):79-108.
- Becker, Gray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169-217
- Klitgaard, Robert E.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thur, Vijay K. 1978. Economics of Crime: An Investigation of the Deterrent Hypothesis for Urban Area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3):459-466.
- Rose-Ackerman, Susan. 1978.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New York: Academic Press.
- 법률저널 .2013. 공무원범죄, 집행유예 비율 평균보다 2배 높아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560016&tblName=tblNews)

투고일자 : 2013. 11. 14

수정일자 : 2013. 12. 18

게재일자 : 2013. 12. 28

국문초록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선중(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본 연구는 부패통제요인 중 사전예방적 요인과 사후통제적 요인이 청렴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통제적 요인을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사전예방적 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적발 및 처벌요인은 사전예방적요인과 청렴도의 관계에서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매개하여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적발 및 처벌요인과 사전예방요인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분석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적발 및 처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적발 및 처벌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의 검증 결과 조직건정성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패방지전략 수립 시 사전예방 요인과 사후통제요인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부패통제요인의 상호작용, 매개효과분석, 조절효과분석